전남매일

제7837호 1989년 6월 29일 창간. 대표전화 062-720-1000 jndn.com 단기 4351년(음력 1월 28일)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민주 전남지사 경선 '불꽃 레이스' 점화

오늘 신정훈·장만채·김영록 출마선언…노관규 채비
당내 역학관계·지지기반 등 뚜렷…결과에 이목 집중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본격화 됐다.

유력주자였던 이개호 의원의 중도포기 이후 하마평만 무성하던 인사들의 출전이 확정된 것으로, 출신지역과 지지기반, 당내 역학관계 등 특장점이 뚜렷한 후보군들간 경선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5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전남지사 출마기자회견을 갖는다.

신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지난 13일 수리됐고, 이날 출마배경과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무소속 전남도의원과 나주시장을 역임했고, 2014년 재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당선된 바 있다.

신 비서관측은 386학생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도움과 자치분권전국연대 대표를 맡으며 친분이 두터운 도내 단체장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같은 날 오전 11시 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장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장 교육감은 재선 교육감으로 전남 전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고, 이낙연 총리의 지방선거 조직을 상당부분 흡수하는 등 경선에서 무시 못할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15일 이임식 후 민주당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13일) 국무회의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뵙고 사직원 제출에 대한 허가도 받았다"며 "앞으로는 전남도민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측은 4년 전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정비에 나섰고, 이개호 의원측 조직과 세력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찌감치 전남지사 출마를 밝힌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경선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1당 사수를 위해 불출마를 요청한 중앙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개호 의원은 차기 농식품부장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에 맞선 야권에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의당과 연대로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숨통이 트였고, 불출마시 민평당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전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 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근산 기자

6·13지방선거 누가 뛰나-광산구청장 ▶3면

MB "다스 내것 아냐·뇌물 모른다"

110억대 뇌물·다스 비자금·횡령 등 조사
검찰, 재소환없이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빼고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은 다스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달러)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일부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해온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와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문건 등 핵심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오후 5시께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기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민간부분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옛 측근들과 대질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시, 전 세계 의료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미얀마·몽골 등 개도국 의료진 초청 기술전수
'공동체 정신' 실천…지역병원 해외진출 효과도

광주시가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의료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 문경래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추진단장,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박홍주 전남대치과병원장, 최범채 시엘병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시엘병원 등 지역 5개 의료기관과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이 개발도상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5개 의료기관은 연수생 선발 및 연수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교육비 지원 등을 맡고, 광주시는 연수생 항공비·체류비 등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미얀마·몽골 등 개발도상국 의료진을 초청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수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정형외과·성형외과·보철과 등이다. 교육생들은 최소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며 의료기술을 익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계기로 해외 의료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해외 환자유치와 지역병원들의 해외진출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국가경계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의료기관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업이 일회성 의료지원이 아닌 전문의료기술 나눔을 통한 광주공동체 정신의 국제적인 실천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